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출장자 : 정혜윤(부연구위원), 박현석(연구위원), 이상직(경북대학교 조교수), 박상훈(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목 적 :

『노동행정의 미래』 과제 수행시 비교 사례로서 일본 노동행정을 파악하고 한국 노동 행정의 특징을 밝혀 바람직한 미래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

○ 일본 각 정당과 당의 후생노동성(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에 해당하는 부회의 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해당 부처와 일본의 노동행정과 정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후생노동성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한국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일본의 노동행정과 노동정치를 파악하며, 일본 정치학자와 만나 일본 정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

* 왜 한국과 일본의 노동행정을 비교하는가
- 양국 모두 미군점령기를 경험하며 미국의 노동행정 체계를 이식 -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권력과 권위가 분열·분산되고 제한된 미국과 같은 약한 국가(the domestic weakness of the American state)와 달리 일본은 강한 국가(strong state: 국가가 사회 내 특정 집단과 독립적으로 정책 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사회 구조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음)로서 행정 관료 체계가 발달했다는 점에서 프랑스, 한국 등과 비슷한 유형(Stephen D.Krasner, 20009)에 속함 - 기업별노조, 연공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기업 내외부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양국 고용체제가 유사성이 큼 - 양국 모두 서유럽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비해 노동 권력이 강하지 않음 - 한일은 유사한 동아시아 발전국가이자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개혁으로 불평등, 비전형 노동의 증가 등 다양한 노동문제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존재 -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한 수상의 리더십 강화(대통령제화 되는 내각제), 비대해지는 대통령실 등의 공통점도 있음 - 그럼에도 한국은 오랜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했고 양국의 민주화 이행 시기가 다르며(45년, 87년), 노동이 체제 내 제도화된 수준도 차이가 있음 - 일당우위다당제(좌우 스펙트럼이 넓은), 양당중심제(좌우 스펙트럼이 좁은) 등 정당체제의 차이, 시민사회의 차이도 존재해 양국 노동행정 체제가 다른 형태로 발전 - 일본 노동 행정은 우리와 어떤 점에서 유사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발전했고 운영되는지 확인한다면 보다 한국의 문제를 파악하고 유형화 작업이 용이

○ 거시적 차원에서는 1990년대 정치개혁 이후 지난 30년간 변화해온 일본 정치와 사회 전반을 이해하고 분석

○ 기 간 : 7/8 ~ 7/12(4박 5일)

○ 대상 국가 및 방문 기관 : 일본 도쿄 오오쿠시 마사키 의원(大串正樹,

자민당, 중의원 4선, 당 후생노동부 회장) 이사 신이치 의원(伊佐進一, 공명당, 중의원 4선, 당 후생노동부 회장), 후생노동성 청사, 공산당 당사,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츄오(中央)대학 법학부 나가키타(中北)교수, 국회 의원회관(참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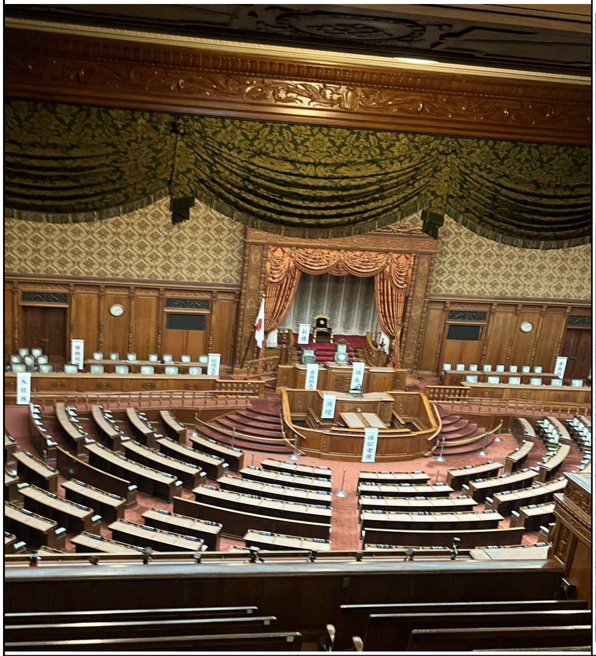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로 작성)

● 출국 후 장소는 계속 일본 도쿄

국회 관람			
월일(요일)	시간	방문 기관과 접촉 인물	업무 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 목록, 질의할 내용 등)
7/8 (월)	08:40 ~ 12:00	출국	O 김포공항 출발 O 하네다공항 도착 O 숙소 이동(국회 근처)
	13:00 ~ 15:00 15:00 ~ 17:00	국회 방문 질의 내용 정리	O 참의원 관람 O 다음날 질의 내용 정리

국회 앞 사진

	
참의원 본회의장	**참의원 황족 대기실**

일본공산당

7/9 (화)	10:00 ~ 12:00	타카와 히로시 (田川 實) 당중앙국제위원회 사무국장	O 일본공산당이 지역과 중앙에서 시민들과 어떻게 노동행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장소, 경험과, 사건 등에 대한 내용 청취 - 지역에서는 당의 지부나 지방의원이 노동자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거나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근로기준감독서나 지방 노동행정기관에 상담과 요청 - 중앙 차원에서는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과 국정조사권에 근거한 행정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요청에 따라 당 차원의 실태 조사 및 청취 등을 실시하고, 후생노동성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요청을 중개 - 후생노동성의 노동조합인 노동성 노동조합(전노련)으로부터 노동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받거나 지방의 노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태를 알려주기도 함 - 접수된 요구사항이나 실태에 대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루어 후생노동성에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함 - 당이 직접 노동자와 직접 만나서 파악한 실태와 현황을 전달함으로써 노동자-국민의 목소리가 노동행정에 반영되기도 하고, 노동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도 함 - 안건은 불법 장시간 노동-과로사(칼퇴) 문제, 산재 인정 문제, 임금체불 등 임금 관련 문제부터 해고, 휴업, 배치전환, 채용-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든 분야의 노동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 -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과 개선 요청이 대부분 - 요청하는 장소는 각지의 근로기준감독서나 지방노동행정기관, 후생노동성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후생노동성 담당자가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의원회관까지 찾아오기도 하는 등 다양 O 일본공산당 입장에서 본 일본 노동기준감독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 전국 380만 개에 달하는 감독 대상 사업장에 비해 감독서는 321개소, 감독관은 전국적으로 3122명에 불과. 1960년 12%였던 감독 실시율은 1990년 4.8%, 2021년에는 3.6%까지 떨어졌고, 신고가 있어도 조사할 시간이 없는 등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와는 거리가 먼 실정 대형 산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감독관만으로는 대응이 늦어지고, 감독관 스스로도 극도의 노동강화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 -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동행정 강화가 필수적. 근로기준감독서의 체제를 강화하고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근로기준감독 행정의

			민간위탁을 허용하지 말고, ILO 기준('선진국'의 경우 노동자 1만 명당 1명의 감독관 배치)에 따라 정부 책임 하에 근로기준감독관 수를 2배 이상 늘려야 함. 감독서의 설치 수와 위치, 감독관의 필요 배치 수에 대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노동자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이와 함께 노동자의 신고권 등 알권리, 조사 결과에 대한 알권리 확립이 중요 O 일본 노동행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일본의 노동행정은 노동법제 개악으로 노동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고, 재계가 원하는 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유리한 근무형태를 용인하고 확대하는 등 후퇴를 거듭 - 현재도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보호가 더욱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일본공산당은 현재의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와 노동행정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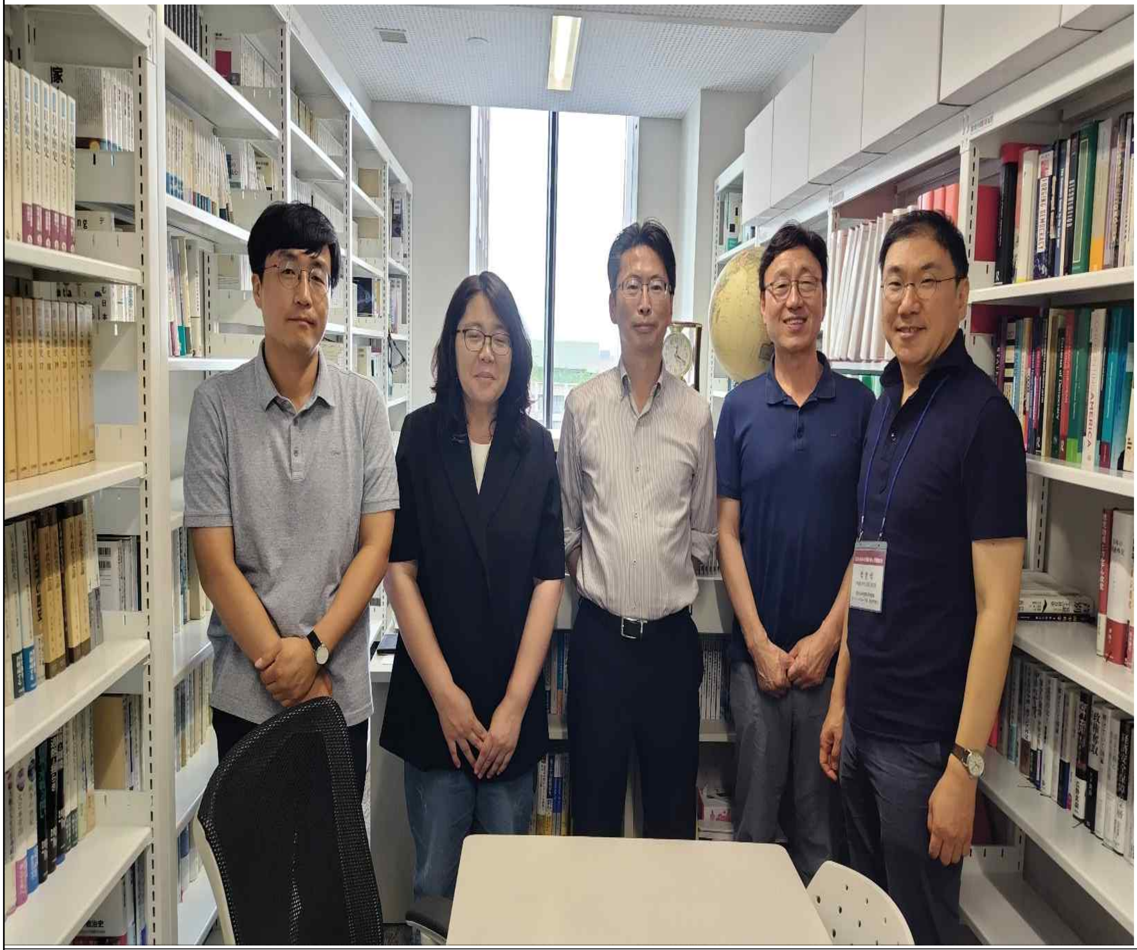
공산당 국제국 타카와 사무국장님과 함께

자민당 오오쿠시 의원

	14:00 ~ 16:00	오오쿠시 마사키(大串正樹, 자민당 후생노동 부회장, 4선 중의원)	O 후생노동성의 특징과 후생노동성 부회 및 위원회의 특성 - 국가 예산 지출이 가장 많은 위원회로 기피 위원회는 아님 - 의사 출신 의원이 많은 등 전문적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이고 상대적으로 자민당에는 노조 출신이나 노동문제 전문가 의원은 많지 않음 - 노동분과의 경우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민당 의원 중에는 경우에 따라 꺼리는 사람도 있음(한국처럼 법안 소위가 구분되지 않기에 의료와 노동을 모두 이해해야 함) - 지역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의제를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의 기피 위원회는 아님 O 사전심사과정에서 부회와 후생노동성 관료와의 관계 - 자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부회에서 사전 조정을 여러 차례 거쳐 거치고 그 과정에서 관료는 자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등 밑 작업을 수행

<table>
<tr><td></td><td></td><td></td><td>O 관료 주도 정치 주도(관저 주도)의 정치에 대한 평가와 견해
- 2000년대 이후 관저 주도 정치는 명백한 사실
- 문제는 리더십의 발휘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얼마나 균형 감각 있게 조정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음</td></tr>
<tr><td></td><td>16:00
~18:00</td><td>의원회관
카페</td><td>O 오늘 인터뷰에 대한 정리 및 내일 일정 공유</td></tr>
<tr><td colspan="4">
</td></tr>
<tr><td colspan="3">
</td><td>자민당 오오쿠시 의원님과 함께

일본의원회관 안내도</td></tr>
<tr><td colspan="4">츄오대학 나가티카 교수</td></tr>
<tr><td>7/10
(수)</td><td>10:00
~ 12:30</td><td>츄오대학
(中央大学)</td><td>O 일본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나가키타 교수와 미리 번역해 공유한 『일본정치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원고를 소재로 행정과 정당정치에 대해 토론
- 파벌은 약해지지만 나름 긍정적 기능이 있어 존속할 것
- 지역에서 자민당은 여전히 강하고 자민당은 상당히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이념 보수</td></tr>
</table>

		법학부 나가키타 코우지(中北浩爾) 교수	는 극소수, 자민당 주류는 지역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민) - 자민당 의원의 강점은 합리성보다는 로컬 커뮤니티적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음 - 당분간 야당이 정권교체를 하기 어렵기에 일본 정치 미래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자민당 내 유사정권교체의 건전성이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음
			
	추오대학 나가키타 교수님과 함께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14:30 ~ 17:00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이사&해외연대추진부장 나카노 오사무(中野理)	O 일본 시민사회와 노동자협동조합 운동과 노동 행정 - 1970년대 중장년층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사업단'이 탄생을 계기로 1979년 본 단체의 전신인 '중장년 고용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가 만들어지고 1986년 '노동자 협동조합' 조직을 설립 - 1988년 '노동자협동조합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고, 2008년 초당적으로 의원 입법을 위한 운동이 진행, 2009년 민주당 정권교체기에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정권이 금방 교체되면서 입법이 불발됨. 단체는 다시 자민당- 공명당 의원들과 열심히 입법 로비활동을 해 2020년 12월 4일 국회에서 노동자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일본은 노동자협동조합법이 늦게 제정된 나라) - 사업 형태는 일본 노동이 민간화, 민영화 되는 흐름과 자율성과 시민 자치라는 경계에 있는 부분이 존재 -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들과의 역할 설정은 항상 어려운 문제이자 과제(조합원이면서도 고용주인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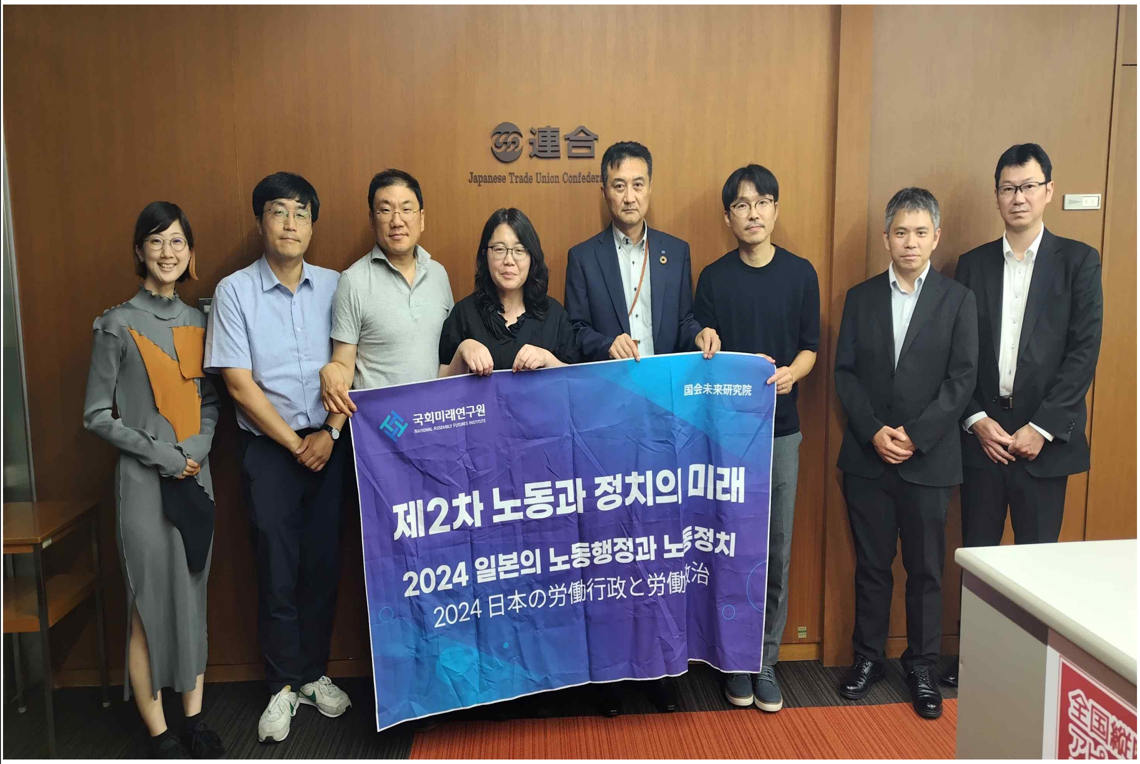
<table>
<tr><td></td><td></td><td></td><td>- 고령자, 65세 이상 조합원이 상당수
- 후생노동성의 위탁사업을 상당 부분 운영하고 있음
O 한국은 일찍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노동자협동조합 단체는 많지 않음. 한국 시민단체가 대체로 제도화를 통해 행정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 일본과 차이가 있을 것</td></tr>
<tr><td colspan="4">
</td></tr>
<tr><td colspan="4">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나카노 이사님과 함께</td></tr>
<tr><td colspan="4">공명당 이사 의원</td></tr>
<tr><td>7/11 (목)</td><td>09:30 ~ 11:30</td><td>이사신이치(伊佐進一, 공명당 후생노동 부회장, 중의원 ,4선)</td><td>O 후생노동성의 특징과 공명당 후생노동 부회의 특징과 정책
- 처음부터 사회복지, 후생노동을 지망하는 의원들이 많음
- 다른 위원회는 사무직이 많지만 후생노동위원회는 의사, 의료직이 많은 편
- 선거구에서(지역구)에서 시민들에게 상담을 받는 분야가 후생노동 분야가 많고 실제로 해결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있음. 그러나 가장 힘든 분야이기도 함(시민 삶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정당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정해진 예산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음)
O 공명당이 현재 후생노동 부문에서 중점을 두는 정책
- 과로사(일과 삶의 양립)가 쟁점이었는데 현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중소기업은 인재 부족이 더 심각(장시간 노동)하며 임금인상도 중소기업까지 다다르는 것이 필요(2.5%인상), 특히 처우가 낮은 개호 관련 업무 관련자들까지 임금 인상이 되는 것이 중요
O 자민당과 여당 연립 정권에서 구체적인 조정 과정과 관료의 역할
- 자민당-공명당 실무자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조정을 한 후에 톱에서 조정을 하며, 그 과정에서 관료는 자료를 제공(최종 결정은 정치인이)</td></tr>
<tr><td colspan="4"></td></tr>
</table>

공명당 이사의원님과 함께

후생노동성			
7/11 (목)	13:00 ~ 15:00	**후생노동성** 대신관방 국제과 우에마츠 타쿠미(植松卓巳) 서기관 등	‘일하는 방식의 개혁’, ‘프리랜서 가이드라인’ 법률 설명 ● 기타 참고 자료집에 상세 내용 첨부 O 프리랜서 가이드라인 만들 때 경제산업성과 조정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상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음. 각각 별도의 역할을 부여받아 법률 조정을 했음 O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관저가 주도한 개혁으로 해당 내용의 정치과정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기로 되어 있음 O 중앙부처 공무원은 한 달에 시간외근로 100시간을 할 정도로 과로
	후생노동성 앞에서 후생노동성 관료들과 함께		
	15:00 ~ 17:00	자료 정리 및 숙소 이동	O 기존 자료 정리 및 새롭게 생긴 인터뷰 장소 질문 정리(렌고) O 체크아웃 및 숙소 이동과 체크인
전 후생노동성 관료 모라사키씨			
7/12 (금)	10:00 ~ 13:30 (점심 병식)	모리사키 이와오(森崎巖, , 전 노동성 노동조합 위원장)	O 일본의 노동행정은 기본적으로 1990년대부터 규제완화 흐름이 진행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확실히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강해짐(대표적 정책은 공공직업안정소의 민간화와 지방 이관, 노동재해보험의 민영화, 성청재편을 통한 내각부 신설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공무원 인사평가제도의 도입) O 일본의 후생노동성, 그 중 노동성 관료들은 노동행정에 신념이 있어 입사하는 관료들이 많음. 이에 대체로 공공직업안정소가 민영화나 지방 이관에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노동보호라는 가치나 규제강화를 중시 - 신자유주의자는 별로 없으며 케인즈주의자들이 대부분이라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백서를 쓸 때에도 의견이 달라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음 O 근로감독관 숫자는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의 영향으로 감독관도 증가하고 감독 건수도

<table>
<tr><td></td><td></td><td></td><td>증가했지만 감독관 숫자가 적음. 독일의 1/5. 프랑스의 2/3 수준으로 사법경찰이란 큰 권한이 있음에도 기업에 가서 조사할 때 혼자 찾아가기에 폭행을 당하는 등 문제가 많음. 그러나 실적 건수로 처리가 되면서 근로감독관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
O 관저 공무원의 위상이 2000년대 이후 확실히 높아짐</td></tr>
<tr><td></td><td colspan="3">
</td></tr>
<tr><td></td><td colspan="3">전 노동성 관료 모라사키씨와 함께</td></tr>
<tr><td></td><td colspan="3">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td></tr>
<tr><td></td><td>14:00
~
16:00</td><td>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정치센터)
일본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의 정치센터
나이토 국장 및 간부</td><td>O 일본의 도쿄도지사 선거 패인에는 입헌민주당계 후보가 공산당과 함께 한 데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렌고는 공산당과 연대에 반대
O 일본 정권교체의 낮은 가능성과 노동정치
- 렌고도 일본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당분간 낮다고 보고 있음. 그럼에도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이 통합을 향해 가기를 희망하며 양당 분열이 렌고의 내부 분열로 연결되지 않기를 희망
O 렌고 중앙은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지방선거는 각 지역 렌고에게 자율 판단을 맡김
O 렌고도 조직내의원이 의원(위원장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없으며 주로 조직 내 2인자들이 위원장이 됨)이 된 이후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재선에 실패하거나 지역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됨</td></tr>
<tr><td></td><td>16:00
~18:00</td><td>최종 연구 정리 모임</td><td>O 최종 연구 정리 모임</td></tr>
</table>

	18:00~ 20:00 20:05 22:20	하네다공항 이동 및 수속 하네다공항 출발 김포공항도착	○ 출국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정치센터 사람들과 함께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일본 노동정책의 변화와 노동 행정의 역할

- 전후 일본의 노동행정은 미군정의 전후 개혁, 60년대 초반까지 격렬한 노동운동·선진적 노동성 관료의 영향으로 중앙집중적이면서도 상당히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노동행정 체계가 구축
-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진행되며 노동행정과 일본 노동정책과 고용체제도 큰 변화를 야기하며 공공직업안정소 등의 노동행정의 분권화·민영화되었고 공무원 감축, 인사관리제도의 변화 등

관료사회의 변화도 적지 않았음

○ 일본 국회 후생노동위원회는 한국의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합쳐진 위원회인데 한국의 선호(기피)위원회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

- 의사나 의료종사자 등의 전문직 등이 많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있겠으나 애초에 지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기에 인기가 있는 위원회라는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었음. 한국 정치에 비해 일본정치가 시민 삶의 직접적인 실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

○ 국회의원의 정책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공설 비서(국가에서 제공하는 비서)는 3인과 자체 고용비서가 있지만 대체로 지역관리에 집중하며 국회에서 보좌하는 비서는 자민당이나 공명당 국회의원 1~2인 정도만 두고 있음

- 보좌진이 자료를 준비하기보다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오래 있으며 스스로 전문성을 충분히 쌓는 것으로 여겨짐. 또한 우리처럼 법안 소위를 구분하지 않아 후생·노동 전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됨.

- 한국과 비교했을 때 법안 발의를 훨씬 적게 하고 국회 개원 기간이 적어(1년에 150일, 임시국회도 한달에서 두달, 한국은 300일) 상대적으로 정책을 연구할 시간이 있으며 다선의원이 많다는 차이

- 기본적으로 상임위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정책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짐(일당우위제 영향과 정당정치가 발달)

○ 관료인가, 관저인가, 정치인인가

- 과거에 비해 정치인이 관료를 지휘해 정책결정을 하고, 2000년대 이후 정당보다 내각 관저가 주도해 정책결정을 하며, 성청 관료보다 관저 관료에게 주도권이 크도록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가 있었음

○ **후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행정체제를 갖춘 일본**(영국 보다는 자본주의 발전이 늦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들을 모방·추수하고, 1919년을 전후하여 노동행정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가, 군국주의화 되는 과정에서는 노동행정에도 국가주적이고 군사적 고려 및 전시노동 동원적 속성 등이 강화되었다가, 2차대전 패배 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모델에 따라 노동행정 체제가 재정비되면서, 자유주의적, 민주적 노동행정과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결합된 유형)과 **후기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행정체제를 가진 한국**(자본주의 발전 수준과 다소 무관하게 미국 등의 주도적인 역할로 근대적 노동행정 체계가 국가 행정체계의 필수적인 일부로 이식되며 노동행정 체제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상태로 출발했으나, 국가의 발전주의 전략과 성향에 따라 그 발전 특정 단계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이 다르게 나타난 유형)인 양국의 노동행정 체제는 유사한 듯 보여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노동이 행정체제에서 제도화된 수준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음

○ 이러한 차이는 노동이 정치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한국에서는 환노위가 기피위원회·인기가 없는 위원회인데 반해,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위원회가 여러 갈등을 다루어 피곤하긴 하지만 시민의 실생활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는 위원회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존재

○ 비록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이지만 공산당이 제4당이고 지역에 탄탄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등 좌우 스펙트럼이 넓고 공명당 등 종교기반 정당이 자민당과 연립정당을 구성하는 등의 한국 정치보다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어 일본 사회 건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음

* 보다 상세 내용 및 해당 방문 기관별 질문지와 답변 녹취록이 궁금하시면 연구진에게 문의주세요.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제출하고 논의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